

국립종자원 직원들이 ‘종자 도둑질’

법씨 정선과정 폐기물량 일부러 늘려 종자 빼들려 전남지원 2명이 유통업자와 3억원 상당 불법거래 농가엔 저품질 공급...불량법씨 파동 관련성 조사

국립종자원 직원들이 농민들에게 공급할 종자를 빼들려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더 나아가 종자 직원들의 종자 빼들리기 뿐만 아니라 질 낮은 종자 공급 및 각종 자재·인건비·설비 현대화 등에도 비리가 개입된 혐의를 잡고 국립종자원 전국 지원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종자원이 국내 기후 풍도에 맞는 우량 품종을 개발·공급하는 커녕, 10년 가까이 종자를 빼들리고 질 낮은 종자를 유통시키는 등 비리행위로 농업생산력 저하 및 농업 유통질서를 어지럽혔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수매 농가로부터 구입한 종자에 대한 정선(精選) 과정에서 선

별 기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종자를 빼들려 유통업자들과 농민들에게 고품질을 받고 판매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직원 A(41)씨 등 2명을 입건하는 한편, 정선 업무에 관여한 종자원 직원들 전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선이란 채취한 종자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충실한 종자만을 골라내는 작업으로, 농가에 공급할 우량 품종의 종자를 선별해내고 낮은 등급의 종자의 경우 유통업자에게 공개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데,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서류 및 선별 기기를 조작, 농가에 공급할 종자를 빼들린 뒤 유통업자에게 돈을 받고 팔아치웠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의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통

해 2009년부터 최근까지 20t 가량 3000만 원 상당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3억 원 상당 200t 규모의 수확한 거래 정황을 잡고 자금 출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같은 기간 종자원 직원들이 순환 근무를 하면서 정선 업무에 참여한다든, 비리 행위가 ‘관행’화된 점을 감안해 국립종자원 6개 지원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지난 2006년부터 이뤄진 정선 서류를 확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또 부산물도 처리해야할 질 낮은 종자들은 농가 공급용 종자로 둔갑시켜 일반 농민들에게 우량 종자인 양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렇게 공급된 종자는 우량 종자에 비해 발아(發芽) 지연 및 불균일 현상 등이 큰 만큼 농업 생산력 저하에 이어질 수 밖에 없어 결국 정부만 믿는 농민만 피해를 입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지급했 정부 보급종의 경우 종자의 품질검사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돼 다른 품종이 섞이지 않아 고품질 쌀 생산에 적합하다고 설명해왔다는 점에서 농

민들의 불신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굵어 죽더라도 싸나락은 베고 죽는다’라는 종자의 중요성을 종자 직원들 스스로 저버렸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1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정부 보급 종자의 발아 불량 등 불량 법씨 파동과의 관련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실정이다.

경찰은 “직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선별 기능을 조작, 물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종자를 쉽게 빼들릴 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종자원이 불량 종자 생산·유통단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직원들이)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다”면서도 책임 있는 사과와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수사 상황을 지켜보자.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협평=황윤학기자 hwang@

광주시, 국방부에 ‘전두환 범종’ 반환 요청

5·18 교육자료 활용... 권은희 의원측도 4일 국방부와 논의

광주시가 최근 국방부에 장성 상무대에 설치된 무각사 범종, 이른바 ‘전두환 범종’ 반환을 공식 요청했다. 국방부로부터 전두환 범종을 반환받기 위한 법적 근거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5일 ‘장성 상무대 내 무각사 범종 반환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식 문서를 국방부에 보냈다. 시가 반환요청을 한 이유는 전두환 범종의 소유권 때문이다.

5·18 민중항쟁 학술 책임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발발 이듬해인 1981년 광주시 서구 상무대 무각사를 방문해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범종을 기증했다. 이후 해당 군부대는 지난 1995년 무각사 부지를 광주시에 무상양여했으며 시는 송광사에 무각사의 관리를 맡겼다.

상무대 이전 후 시민들의 출입이 잦아지면서 범종의 존재를 알게 된 5월 관련단체 등은 내란죄 및 반란죄로 국가의 단죄를 받은 전두환의 범종이 광주에서 여전히 울려 퍼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철거를 요구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무각사는 2006년~2007년 사이 전두환 범종을 철거했다. 이후 행방이 묘연했던 이 종이 이전된 장성 상무대 무각사로 옮겨져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유권 논란이 일었다.

시는 14년 전 국방부로부터 무각사 부지를 양수받은 이후 그간 어느 누구에게도 관련 물품 등을 양도한 적이 없다며 범종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시는 최근 시청 사무실에서 당시 국방부와 맺은 기부양여품목자료를 찾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여품목내 무각사 범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반환받게 된다면 5월 관련단체와 협의해 5·18 교육자료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울)측은 4일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 전두환 범종 반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권은희 의원은 지난 10월 27일 국방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육군 국방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육군 사령부가 부대관리운령을 어기고 전두환 범종을 기부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도로 결빙 대비 분주 1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제철사재작업장에서 북구청 건설과 직원들이 강설로 인한 관내 주요도로 결빙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동주민센터 차량에 모래와 염화칼슘을 싣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헬기 띄운 상태 해경이 퇴선방송하면 세월호 승객들에게 얼마나 전달될까

광주지법, 내달 목포해경 123정장 혐의 입증위해 현장검증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목포해경 511호 헬기가 떠 있는 상황에서 목포해경 123정이 확성기를 통해 선내 승객들을 대상으로 퇴선 방송을 실시했다면 얼마나 많은 승객들에게 전달돼 탈출할 수 있었을까.

법원이 당시 구조 상황을 그대로 재연(再演)하는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 세월호 침몰 당시 퇴선 유도·승객 구조 조치 미흡 등 부실한 구조 활동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던 전 목포해경 123정장 김경일 경위의 혐의 여부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는 판단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장사 임정엽)는 1일 지법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일 경위의 혐의 여부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는 판단에다.

김 경위의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 정리 부족 등의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 출석은 필수적 요건이지만 재판부는

“그래도 재판 첫날인데 피고인이 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모두 진술, 변호인 의견 진술 등을 들은 뒤 방송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고 승객 등에게 전달돼 모두 바다에 뛰어들어 할 수 있었는지, 헬기 소리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배 밖에서 방송했을 때 전달될지 여부 등이 향후 재판 쟁점으로 예고되겠다.

재판부는 1월 중 헬기가 떠 있는 상황에서 123정 확성기 데시벨(db) 측정과 비슷한 규모의 배 안에서 (방송을) 들리는 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김 경위는 지난 4월 16일 오전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인천경찰청장에 고홍 출신 윤종기 치안정감 광주경찰청장에 최종현 중앙경찰학교장 내정

고홍 출신 윤종기(55) 충북지방경찰청장이 새롭게 치안정감 자리로 승격된 인천지방경찰청장에 내정됐다. 또 무안 출신의 박경민 경찰청 대변인으로 치안감으로 승진, 중앙경찰학교장으로 내정됐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치안정감 보직인 인천지방경찰청장에 윤종기 충북경찰청장을 승진, 내정할 것을 비롯, 경찰청 차장에 이상원 인천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에 권기선 경북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에 김중앙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 4명을 각각 승진·내정했다.

치안정감은 10만명에 달하는 경찰을 총괄하는 경찰청장 계급인 치안총감(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으로 서울 직제로는 1급 공무원에 해당하지만 경찰 내 6명밖에 없는 고위직이다.

윤 청장은 고홍이 고향으로 광주 인성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경찰 장학생으로 졸업한 뒤 경찰에 경위로 입문, 충남청 경비교통과장, 서울청 경비 2과장, 서울청 경비부장, 서울청 차장, 충북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윤종기 청장 최정현 청장

무안 출신인 박경민 경찰청 대변인으로 치안감으로 승진, 중앙경찰학교장에 내정되는 등 기존 근무관 6명도 치안감으로 승진·내정됐다.

또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최종현(55) 중앙경찰학교장이 전보됐다. 최 청장은 강릉 출신으로 서울 인창고와 고려대 대학원(사회학 박사)을 거쳐 지난 1994년 박사 특채(경장)로 경찰에 입문했다. 충북청 방법과장, 서울청 경비과장 등을 지냈고 경북청 차장, 경기청 1차장 등 각 분야를 두루 역임했다. 정전배 현 광주지방청장은 올해 말 치안감 계급 정년(4년)을 앞두고 있으며 백승호(50) 전남지방경찰청장은 유임됐다.

/김지율기자 dok2000@

한국 원양어선 베링해 좌초 선원 62명 탑승...1명 사망

사조산업의 명태잡이 틀물선인 ‘501호 룡호’가 1일 오후 1시40분경(한국시간) 러시아 베링해에서 좌초됐다.

이 선박에는 러시아 감독관을 포함해 한국인 선원 11명, 외국인 선원 51명 등 62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해역 주변에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는 현재 침몰한 상태이며 한국인 선원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호호는 건조된 지 40여년이 지난 배로 지난 7월 10일 외국인 선원 51명과 한국인 11명을 싣고 출항했다. 해상수산부는 이날 “사고원인에 대해 파악 중이며 선박이 침수돼 배가 좌초됐다고 보고받았다”면서 “현재는 침몰한 상태”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도로 결빙 대비 분주 1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제철사재작업장에서 북구청 건설과 직원들이 강설로 인한 관내 주요도로 결빙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동주민센터 차량에 모래와 염화칼슘을 싣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인도 막은 불법주차 격분...시각장애인이 지팡이로 승용차 ‘팽망’

“...길을 걷던 중 인도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가로막자 격분, 들고 있던 지팡이로 차량을 내리친 60대 시각장애인 남성이 경찰서행.

○1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김모(62)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H공단입구에서 사무실 앞에서 인도에 불법주차된 오토모(56)씨의 승용차를 발견, 차량 보닛을 시

각장애인을 지팡이로 수차례 내리쳐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는 것.

“...시각장애 1급인 김씨는 지난 9월에도 광산구청을 찾아가 “주정차위반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지팡이를 타격을 부수기도 했는데, 경찰에서 “알고 잘 안 보이는데 사람 다니는 길을 막아서야 되겠느냐”고 분통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9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단위: 원]	비고
2014타경 10371	5	동소 510-3 2099㎡	담	25,188,000 25,18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6	국정공안오산면국리 산254-5 683㎡ [매각대상]안락곡석물및보통기상수목등수주식채, 현황진, 묘지리이용,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임야	3,483,300 3,483,300	일부보묘수기소재, 분묘지권설정여지있음
2014타경 10500	1	광산구 산막동 445-1 1197㎡	담	51,471,000 51,471,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446 1084㎡	담	46,612,000 46,61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11244	1	정성군 황룡면 장산리 2-1 744㎡	담	41,268,000	일괄매각, 공유자 오금석, 오복래, 오성석각지분1/5전부
2014타경 13295	1	서구 내방동 385-18 162㎡ [공유자이중수주분13분의2전부]	대	12,385,240 12,385,240	행사제한
2014타경 13996	1	나주시 노안면 유곡리 294 2074㎡	담	30,280,400 30,280,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14595	1	정성군 삼계면 상도리 700 2585㎡	담	46,530,000 46,53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14타경 8668	1	북구 오봉동 1110-34 매물지식센터 그린동 근린시설	상가	126,000,000 126,000,000	1,2층복수승임
-------------	---	--------------------------------	----	----------------------------	----------

● 고건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 농지취득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을 위해 최고거래가격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을 초과하여 매각이 불가 할 때에는 매수신청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 공유자가 민사청탁 제140조에 의한 무효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매수 그 공짜로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일에서는 무효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매각에 매수신청이 없는 경우 최후매각가격을 공짜로 매수신고번호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4. 12. 17. [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4. 12. 24. [수]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법원법정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권혁민

2014. 12. 2.